

광주·전남 당선인들 상임위 배정 '주목'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첫 회동...국회 원 구성 논의 본격화 법정 시한내 마무리 공감대...여야, 법사위원장 힘 겨루기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국회 의정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식이 돼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는 만큼, 여야가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 한다.

특히 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고,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정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총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오는 6월 8일 상임위원장 배정 이후 구체화 할 전망이다. 송갑석 의원(서구갑)과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서상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등의 상임위 간사 배정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는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며 "다음 달 8일 전에 구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급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헌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 협상

지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률 처리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전한 견제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국회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명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각 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합당은 '국

민부담 경감 경제 활성화' 법안과 '사회안전망 확충' 법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메시지' 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휴일 및 '코로나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이용수 할머니 회견, 윤미향 당선인 참석 관심

민주당 "사실관계 파악 먼저"...윤 당선인 별도 해명 자리 준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관련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한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이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회일비하듯 하나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중심을 잡고 지켜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당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설촌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그간 논란과 윤 당선인의 입장을 15페이지 분량 문서로 정리해 보고했다. 문서에는 "오인 보도가 다수 존재", "지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이 운동의 지향점일 수 없음" 등의 옹호 논리가 기재됐다.

김영춘 의원은 자신의 앞선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여론, 기관들의 감사·수사에 끌려가기보다는 당이 주도적으로 진위를 가리고 책임의 경중을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사퇴를 거론한 것은 본인의 문제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정말 억울하다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도 해명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내부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윤 당

선인의 거취를 매듭짓지 않고는 현재 국면이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 당선인이 이 할머니의 회견장을 찾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대구로 이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당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에게 "며칠 내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회견과는 무관하게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갑석,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분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부 예정이었던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인 비대위 키워드는 '청년·전문가'

통합당, 30·40 전문가 4명 영입...27일 당협위원장 연찬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는 인문과 노선, 정강·정책을 총망라해 고강도 쇄신에 들어갈 전망이다. 쇄신의 싹호탄이 될 비대위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전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경제·복지·고용 등 각 분야의 30·40세대 외부 전문가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내에서 현역 의원 중 조·재선 그룹에서 1명씩을 추천받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원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재섭(서울 도봉갑)·천하람(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 후보 등 청년층이 비대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총선참패 후 '청년 비상대책위'를 꾸려 활동 중이다. 김 내정자는 주변에 청년 비대위와 관련해 "중용할 인물이 몇몇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내정자가 80대 원로이고, 주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등 60대 중진의원이 비대위에 들어가 있으니 나머지 인선은 젊고 개혁적인 그룹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오는 27일 4·15 총선에 낙선한 후보들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열어 총선 참패의 원인 진단과 함께 향후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위원회를 겨냥해 '김종인 비대위'의 비전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산도 깔렸다.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부칙에 규정된 '8월 31일 전당대회' 조항이 삭제되어야 김 내정자의 비대위 임명직 취임이 절차적으로 완료되기 때문이다.

비대위 인선과 총선 참패 진단이 끝난 뒤 김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는 통합당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새로 세우는 일이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당선인 혁신위원장 선출

정의당은 24일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장혜영(33) 비례대표 당선인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장 당선인은 "정의당이 시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혁신위는 강민진 대변인, 권수정 서울 시의회 의원,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외부 전문

가, 청년활동가, 사회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가운데 여성이 과반이며 20~30대 청년도 40%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위는 8월 이전에 열릴 대의원대회에 혁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혁신안

안이 통과된 뒤에는 새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총선 이후 당의 일신을 위한 조기 사퇴를 선언하고 혁신위를 구성, 늦어도 8월 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이 뽑은 최고 입법 '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사무처 조사 52% 응답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4일 국회사무처는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5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었다"면서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유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정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였다.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갑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